

2026년 6월호

정운관세법인 소식지

2024년 9월 정운 소식

1) 관세동향



[1] (관세청)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플릿 안내



□ (관세청)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플릿 안내

○ 관세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수출업체가 환급신청 전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의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오니 소요량 산정에 애로가 있는 업체, 산정한 소요량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업체 및 간이정액환급에서 개별환급으로 전환 예정인 업체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요량 사전심사 홍보리플릿 1부.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전, 수출 물품 소요량 계산의 정확성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어떤 이점이 있나요 ?

- 과다환급 방지**
소요량 오류로 인한 추정 및 가산금 부담 예방
- 소요량 계산의 번거로움 해소**
부산물 공제율 산출 등 복잡한 계산과정 어려움 해결
- 관세조사 완화**
사전심사 결정 물품 환급 부문 관세조사 완화 ('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신속환급 지원**
사전심사 결정 물품 환급신청건 서류제출 비율 완화 ('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소요량 사전심사 어디서 신청하나요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 를 통해 관할지 세관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
법령·판례 등 > 별표/서식에서 검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대상을 알려주세요 !

- 개별환급 업체**
- 기초원재료납부증명서 발급업체**

※ 단,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적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요량 사전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접수**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 근거 자료 등 제출 (서류 안내 및 일정 조율 위해 담당자 사전문의 필수)
-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심사**
필요 시 현지 확인 병행 (자료 보정 필요 시 보정기간 20일 추가)
- 결과 통지 (50일 이내)**
확정된 소요량을 적용하여 수출환급 신청 (사전심사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재심사 신청 가능)

1) 관세동향



[2] (관세청)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시행 안내

□ (관세청)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시행 안내

○ 관세청 심사정책과-901(2026.5.8.) 관련입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26.5.8.)에 따라,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을 통보·배포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1부.

2.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시행 안내공문 1부.

[3] 인도네시아, 2026년 시행된 12개 품목 수입 금지와 산업적 시사점

2026년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된 12개 품목 수입 금지에 대한 정책 개요 및 산업적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5년 12월 29일, 12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무역부장관령(Permendag) 제 47호/2025를 공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자국 농민 및 국내 산업 보호, 수입 사기 및 밀수 방지, 환경 보전, 공중 보건 및 국가 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장관령(Permendag No. 18/2021, No. 40/2022 등)을 전면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특히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자유 무역지역(FTZ),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특별경제구역(SEZ) 내에서도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허점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도네시아 12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제 47호/2025>

1) 관세동향



구분	내용
발효일	2026년 1월 1일
근거 법령	Permendag No. 47/2025(2025년 12월 29일공표)
기존 법령과의 관계	기존 Permendag No. 31/2025는 유효유지; 수입 금지는 절대적 금지(일부 예외 조항 존재)
면세 구역 적용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 특별경제구역도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 불가
위반 시 제재	Permendag 18/2021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및/또는 벌금 50억 루피아(IDR)

표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 수입 금지 12개 품목



가. 식품 및 농업 관련 품목

1) 설탕(HS code 1701)

원당 및 특정 정제당을 포함한 설탕류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다만, 기존 Permendag No. 31/2025는 폐지되지 않아, 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을 별도로 취득한 경우 가공·제조 목적의 설탕 수입은 여전히 허용된다. 이는 완전한 수입 차단이 아닌 조건부 제한에 해당한다.

금지 배경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국내 설탕 생산량이 300만 톤에 달해 연간 수요(283만 6천 톤)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전년도 이월 제고 143만 7천 톤을 고려할 때 수입 없이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쌀(HS code 1006)

찰쌀, 재스민 쌀, 바스마티 쌀 등 다양한 품종의 쌀 수입이 제한되었다. 수입 허가 여부는 쌀의 종류만이 아닌 수입 목적과 수입업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 소비용 쌀 수입: Bulog, Sarinah, RNI 등 국영기업(BUMN)에 한해 허용
- 산업용 쌀 수입: 생산자 수입업자(IP, Importer Producer) 지위를 갖춘 기업
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 가능 (단, 판매 불가, 원재료 사용 의무)

2026년 인도네시아 국내 쌀 제고는 약 350만 톤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선언하며 수입 축소 방침을 밝혔다.

나. 환경 관련 품목

3) 오존층 파괴 물질(BPO) 함유 제품

CFC, HCFC-22, HCFC-123 등 오존층 파괴 물질(BPO, Bahan Perusak Ozon)을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인도네시아의 국제 환경 협약 이행 의무와 직접 연관된 조치이다.

- 예외 조항 : 장관령 시행일(2026년 1월 1일) 이전에 선적된 냉방·냉동 관련 물품은,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날짜를 기준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목적항 도착분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다.

4) 소화기 및 냉각 시스템 기반 제품

HCFC-123 냉매를 사용하는 소화기 및 냉각 시스템 전자기기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다. 중고품 및 위생 관련 품목

5) 중고 포대 및 자루

재사용된 포대·자루류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위생 문제 및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조치이다.

6) 중고 의류

헌 옷 수입은 공중 보건 위험, 환경 위생 문제, 국내 섬유 산업 및 중소기업(UMKM) 보호 차원에서 금지되었다.

라. 유해 물질 및 의약품 관련 품목

7) 유해물질

특정 유형의 유해 물질 수입이 금지되었다. 방사성 오염 물질 등 환경 및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화학 물질이 포함된다.

8) 특정 의약품 및 식품 원료

인도네시아 국내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별도로 지정된 특정 의약품·식품 원재료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9) 수은 함유 의료 기기

수은을 포함하는 의료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이는 환경 보호 및 공중 보건 측면에서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이다.

마. 농기구 및 기타 품목

10) 전통 농기구

특정 전통 농업 도구의 수입이 제한되었다. 국내 농기구 산업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11) 고철 및 특정 화학물질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 내 사업자도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된 고철 및 화학물질은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Permendag 47/2025의 핵심 신설 조항 중 하나로, 기존에는 면세 혜택 지역에서의 수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전면 차단되었다.

12) 기타 지정 품목

위 품목 외에도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국제 규범에 반하는 위험 폐기물 등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 국내 기업 영향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등은 이번 수입 금지 12개 품목과 직접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경제구역 내 면세 혜택 차단, 냉매 규제 강화, 의약품 원료 기준 적합 요건 강화 등은 관련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 기업 및 무역 업체들은 INSW(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를 통해 해당 HS Code의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서 한국이 주로 영향을 받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및 식품 원료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완제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규정된 '특정 의약품 및 식품 원료' 금지 항목은 인도네시아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만큼, 기준 적합 여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수출 기업들은 BPOM(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냉방·냉동 관련 기기 및 부품

한국은 냉방기기 및 관련 부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에서 CFC, HCFC-22, HCFC-123 등 금지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이 차단되었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해당 냉매에 대한 생산·사용 규제를 이미 강화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나, 구형 제품 재고 처리 문제 및 일부 수출용 부품에 대한 HS Code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3) 철강 및 화학 제품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고철(Scrap Metal) 및 특정 화학물질은 자유무역지역 및 특별경제구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기존에 해당 구역을 경유하던 한국 철강·화학 기업들의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제조 거점을 둔 한국 철강·화학 계열사들은 원재료 조달 경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 주변국 영향

쌀 수출국(베트남, 미얀마 등), 중고 의류 수출국, 특정 화학 물질 공급국 등도 수출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상당수 품목은 기존에도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태국 무역투자진흥부(DITP)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설탕이다. 태국은 인도네시아 최대 원당 공급국 중 하나로, 2025년 1~11월 기준 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설탕 수출액은 약 7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 쌀, 냉방·냉동 제품도 잠재적 영향권에 있으나, 냉매 관련 규제는 태국 내에서도 이미 동일 물질의 생산·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및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식량 자급 및 국내 산업 보호 기조를 구체화한 정책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쌀·설탕·옥수수 등 전략 식량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수입 차단이 아닌 조건부 허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가공·산업용 원재료 수입에 있어 예외 경로는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와 무역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HS Code 확인, 수입업자 지위(IP vs 일반 수입업자) 파악, 수입 목적 명확화 등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2. FTA 이슈



[1] 산업부, 한국-방글라데시 탄소시장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가 방글라데시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탄소시장 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산업부는 5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나흘간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협력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환경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탄소시장 관련 주요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한)산업부 - (방)환경산림기후변화부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Carbon Market Framework)’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 감축사업 추진과 투자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프로그램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국내기업 참여 세미나 ▲파리협정 제6조 실무 교육 ▲산업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수 첫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방글라데시측은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계획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실무 교육에서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절차와 방법론, 투자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윤진영 기후경제통상과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업 발굴과 투자 연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와의 탄소시장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FTA 이슈



[2] WTO 개혁,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을 위한 다자논의 촉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5월6일(수)~7일(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측 수석 대표로 참석하여, 제 14차 WTO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 야운 데)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국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최근 확산되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적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였다.

WTO 개혁 등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후속의제 논의

이번 일반이사회는 MC-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다자회의로서,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는 자리였다. 우리나라는 MC-14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자로서 「WTO 개혁 작업계획(안)」 합의** 도출을 주도한 바 있으며, WTO투자원활화협정 공동의장국(한국·칠레)으로서도 '24년 타결된 협정안을 WTO 법체계 내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 왔다.

* ▲WTO 개혁 작업계획,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전자상거래협정, 투자원활화협정 등 새로운 규범 채택 등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여타 이슈와 연계로 공식 채택은 무산권 실장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약 30년간 유지되어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MC-14에서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자원활화협정에 대해서는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 소식지 내 관련 개정문 및 부칙관련은 메일상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 FTA 이슈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자제 촉구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의 확산이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다자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과잉·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역행하는 조치를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영국·일본·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양자협의를 갖고, 최근 EU·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권혜진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TRQ)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자제 촉구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의 확산이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다자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과잉·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역행하는 조치를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영국·일본·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양자협의를 갖고, 최근 EU·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권혜진 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TRQ)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출바우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6 수출바우처 사업

정운관세법인 수출 지원 서비스

최대 70% 지원

~~~~~

수출바우처는
중소, 중견기업이 일정 자비 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로 수출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26 수출 바우처 안내드립니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정운관세법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맞춤 무역 실무 교육• 산업 맞춤 HS CODE 교육• 관세 환급, FTA 활용 교육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 FTA 사후검증, 원산지조사 대응
수출통관	관세 환급
기업심사, AEO	CBP Ruling

함께성장하는 정운관세법인 입니다:)



본 소식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511-5926
E-mail : doc@jwccs.com

